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남조선 <성신대문제대책협의회> 공동대표
비효재, 윤정옥, 김희원 선생,

각국 대표 여러분!

나는 먼저 《제3차 <종군위안부> 문제 아세아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여 순례 대하여 토론회 주최측에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이리분들을 통하여 남녘의 녀성들에게 보내는 북녘녀성들의 동포애의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한 《종군위안부》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는 공동된 지향과 념원을 안고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아세아의 여러 나라 녀성대표들을 우리 대표단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3차 연대회의는 제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우리 조선이 일제식민지통치에서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릴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전에 우리 민족이 기다란 삼척과 기쁨속에 맞이한 석사의 날 8.15는 우리 민족이 41년동안이나 상요된 식민지명예를 벗어던진 해방의 날인 동시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갈라진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해방 50년이 되는 1995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 앞에는 분렬의 비극을 하루빨리 가시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민족사적과제와 함께 인제에 의한 조선인 600만 강제연행분제, 100만 학살분제, 36만의 군인, 군속들에 대한 보상분제, 특히는 조선녀성들에게 강요한 천인강노할 만행 등 전시죄행을 총결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나서고있습니다.

온 거래가 부풀 가슴을 안고 조국해방 50년을 민족 공동의 봉인대축신으로 성대히 기념하기 위하여 여러가지 다채로운 사업을 준비하고있는 이 시각에도 이전 <종군

위안부》들과 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날에 당한 치욕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일제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서수에 시를 떨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 소집된 련대회의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식된지 반세기가 되는 올해에 《종군위안부》문제물 중국적으로 해결하고자 말하는 조선의 모든 여성들과 전세계 아세아여성들의 념원에 부합되게 성과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역사상 가장 큰 피해자들이며 수난자등인 《종군위안부》들의 아픈 상처를 조금이나마 달래주고 앞날에 새로운 희망이 깃들게 되기를 충심으로 기대합니다.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범죄에 대한 설산을 똑바로 하는것은 일제의 과거를 청산하는데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감행한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은 당시 일본정부가 군부와 선택하여 국가정책으로 실시한 선대미문의 인권유린행위이며 민족멸살책등이었습니다.

일제는 20여만에 달하는 조선여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아세아나라 여성들을 강제로 련행, 납치하여 악착하게 고지없는 강간과 문간행위를 강요하였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의 일종성은 중세기적인 야만성과 현대적교활성을 결합하여 약소민족의 존엄과 명예, 여성들의 성조와 생명을 잔악하게 침해하고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불 전번 부정하고 국제법을 란폭하게 유린한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까지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보상대책도 취하지 않고있습니다.

이것은 《종군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입니다.

너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일본정부가 《종군위안부》범죄사건의 진상을 은폐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최근에 그 무슨 《민간기금안》이란것을 들고나와 책임에서 벗어나보려 하고있는 사실입니다.

《종군위안부》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의롭고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일본정부가 그 어떤 감언리설로 《민간기금안》을 합리화하려 해도 선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간기금안》이라는것이 일본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낸것이기때문입니다.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정부는 내외여론의 압력에 못이겨 몇차례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그 부속 《조사결과》라는것을 발표하였으나 아직 한번도 사건의 진상과 책임문제를 명백히 밝힌적이 없습니다.

일본정부당국이 《종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적보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을 대제로 두가지인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종군위안부》범죄행위에 일본정부가 관여했다는 물적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2차대전 이후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 문제가 해결되었다는것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제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군위안부》범죄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조리 감추어두고 이 사건에 일본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것은 일본정부당국의 절면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있습니다.

원래 일본정부는 자기들의 전시죄행을 청산할 의지도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당국은 《종군위안부》들의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피해생존자들이 내성으로서 자기의 과거를 보충시키기등 까려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이 사실 자체를 영원한 흑막속에 분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위청문서고에서 《위안소》의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서가 발견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황군》의 관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전시조건에서 20여만에 달하는 《종군위안부》를 상제면행하고 관리하는것과 같은 특대형 조직범죄는 당국의 관여없이 감행될수 없는것입니다.

그리고 《종군위안부》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이선 일본

의 관리들이 일본정부당국의 시령밑에 이 범죄행위들 감행하였다는것을 증인하고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어떤 술책으로써든 《중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국가간협정》에 의하여 국가적보상이 있을수 없다고 하는것도 생역지에 불과한것입니다.

국제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되는 국제법률가위원회는 얼마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그 무슨 《협정》이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보상청구권을 세약할수 없다는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개인보상을 거부하는 일본정부의 립장이 부당하다는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중군위안부》범죄는 과거 일본국가가 저지른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현 일본정부가 선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분제이라는것을 잘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정부는 《민간기급안》을 성사시킴으로써 《중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정부적책임에서 벗어나고 보상문제를 민간인들에게 떠맡기려 하고있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추진시키는 《민간기급안》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과거죄행을 씻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정부가 저지른 전죄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일본인민들에게 추가부담을 불피우게 될것입니다.

민간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베푸는척하면서 사기가 서야 할 책임에서 빚이나려는 일본정부당국의 《민간기급안》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철저히 지지파탄시켜야 할것입니다.

둘째로, 《민간기급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일제의 《중군위안부》만행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도록 조장시키는것으로 되기때분입니다.

일본정부가 인류력사앞에 그토록 엄중한 범죄행위들 시시르고도 집요하게 과거징산을 회피하는것은 결국 그들이

시들의 과거죄행을 합리화하고있다는것을 밀해주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국력 합리화해나서는것은 앞으로도 그러한 행위들 다시 감행하려는 기도를 속에 품고있다고밖에 달리 볼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망령들이 되살아나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정당화해나시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일부 지방의회들에서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침략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고 침략전쟁마당에 내몰려죽은 《선물자》들을 《조국의 안녕》과 《고향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세력이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것은 곧 그러한 범죄행위들 되풀이하려 한다는것으로밖에 달리 이해할수 없는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정부와 되살아난 일본의 군국주의세력이 이전 군국주의자들이 걸었던 범죄의 길, 침략전쟁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하고있다는것을 우리는 잘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당국이 들고나오는 《민간기금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이 일본군국주의침략야망에 무체실용 하는 것으로 되리라는것은 의심할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고안해낸 《민간기금안》의 교활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들 단호히 서지시켜야 할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민간기금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종군위안부》피해당사자들에게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기때문입니다.

《종군위안부》문제는 몇푼의 보상금을 주는것으로 해결할수 있는 실무적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종군위안부》들의 인권에 관한 문제, 민족의 존엄과 명예에 관한 문제이며 국제정의와 도의에 관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군위안부》들의 짓밟힌 존엄과 잃어버린 청춘, 그들의 가슴속에 남긴 뼈아픈 상처는 그 무엇으로써도 회복시킬수 없습니다.

시금 《종군위안부》들이 한결같이 일본정부가 물질적 피해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보상이란 일본정부당국이 과거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똑똑히 사죄를 한대 기초하여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정부가 이 입언한 현실을 외면하고 《위안부》이요 위요 하고 잔피를 부리며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은 《종군위안부》피해사들에 대한 용서할수 없는 2중의 범죄가 아닐수 없습니다.

일본정부당국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응당 자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데서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것입니다.

제 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50년이 되는 올해는 일본이 국제사회앞에 자기의 성실성과 양심을 검증받을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될것입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과거죄행도 칭찬하지 않고 유엔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하고있는것은 그들이 앓을 자리, 선자리도 기려보지 못하고있다는것을 보여주는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지신을 바로 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의 죄행에 대한 진상부터 선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가 《민간기금안》이라는것을 들고 다닐것이 아니라 시시른 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똑똑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전시범죄에 책임이 있는 사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를 되풀이되지 않겠다는것을 세계앞에 실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을 잘노무 하기 위하여 일본군의 《종군위안부》범죄행위를 역사교과서에 사실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후대들을 옳게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본정부가 죄악에 찬 과거를

성실히 반성하고 칭찬하며 석사의 오류뿐 다시 되풀이 하지 않고 아세아인민들과 함께 신성한 진선과 평화의 길을 걸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종군위안부》 범죄행위를 금년안으로 용케 해결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하여 옹당 강조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는 일본의 《종군위안부》 범죄행위를 가망으로 비호하면서 그와의 투쟁을 용케 해나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일부 세력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미 《종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요구를 포기한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과거에 대한 감정을 비리고 앞을 내다보며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나아가야 한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조선에서 울려나오고있는 이러한 《보상요구포기론》이 일본과 1965년에 체결한 일방적인 《재산청구 및 경제협력협정》이 빚어낸 역사지비극의 결과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상요구포기론》은 《재산청구협정》과 함께 민족의 리의를 침해하고 민족의 한 성원으로서는 자격을 스스로 저버리는 행동이며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두번다시 훼손시키고 피해자들을 영원한 고통속에 몰아넣는 반민족적 행동이 아닐수 없습니다.

민족의 존엄과 명예를 생명보다 귀중히 여기는 우리는 이러한 반민족적행위를 절대로 수수방관할수 없습니다.

나는 이번 《제3차 <종군위안부> 문제 아세아연대회의》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여성들의 민족적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우리 조선여성들과 아세아여성들이 일본의 과거죄행문서에 대치해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북한발제 요약, 정리한 것입니다.

일본정부의 민간기금안을 왜 반대하는가?

홍선옥

(종군위안부및 태평양전쟁피해보상대책위원회)

각국 대표여러분!

나는 먼저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연대회의를 조직하고 여기에 우리 대표단을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토론회 주최측에 사의를 표하며, 아울러 여러분들을 통하여 남녘의 여성들에게 보내는 북녘 여성들의 동포애적 인사를 전하는 바입니다. 나는 또한 일본군'위안부'문제를 옳게 해결하려는 공동된 지향과 염원을 안고, 이번 토론회에 참가한 아시아의 여러 나라 여성대표들을 우리 대표단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제 3차 연대회의는 제 2차 세계대전이 종결되고 우리 조선이 일제식민지 통치에서 해방된지 50년이 되는 뜻깊은 해에 열린 것으로 하여 그 의의가 자못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 전에 우리 민족이 커다란 감격과 기쁨속에 맞이한 역사의 날 8.15는 우리 민족이 41년동안이나 강요된 식민지 명예를 벗어던진 해방의 날인 동시에 외세에 의하여 나라와 민족이 인공적으로 갈라진 비극의 날이기도 합니다.

조국해방 50돐이 되는 1995년을 맞이한 우리 민족 앞에는 분열의 비극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여야 할 민족사적 과제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제에 의한 조선인 600만 강제연행문제, 100만 학살문제, 36만의 군인.군속들에 대한 보상문제, 특히는 조선여성들에게 강요한 천인공노할 만행 등 전시죄행을 총결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각에도 이전 일본군'위안부'들과그 유가족들은 아직도 지난날에 당한 치욕의 한을 풀지 못하고 일제에 대한 한없는 분노와 저주에 치를 떨고 있습니다. 일본군의 일본군'위안부'범죄에 대한 결산을 똑바로 하는 것은 일제의 과거를 청산하는 데서 제기되는 기본문제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일제가 감행한 일본군'위안부' 범죄사건은 당시 일본정부가 군부와 결탁하여 국가정책으로 실시한 전대미문의 인권유린 행위이며 민족말살책동이었습니다. 일제가 저지른 일본군'위안부'범죄사건의 엄중성은 중세기적인 야만성과 현대적 교활성을 결합하여 약소민족의 존엄과 명예, 여성들의 정조와 생명을 잔악하게 침해하고 유린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의를 전면 부정하고 국제법을 난폭하게 유린한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오늘까지 지난날의 범죄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들에 대한 아무런 국가적 보상대책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모독행위이며 역사에 대한 공공연한 도전입니다.

더우기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일본정부가 일본군‘위안부’ 범죄사실의 진상을 은폐하고, 그 해결을 위한 책임을 한사코 회피하면서 최근에 그 무슨 민간기금안이란 것을 들고 나와 책임에서 벗어나 보려 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 뿐 아니라 정의를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은 일본정부가 그 어떤 감언이설로 민간기금안을 합리화 하려 해도 절대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민간기금안’ 이라는 것이 일본정부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 당국이 일본군‘위안부’문제에 대한 국가적 보상책임을 회피하는 구실은 대체로 두가지 인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일본군‘위안부’ 범죄행위에 일본정부가 관여했다는 물적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2차 대전이후 국가간에 체결한 협정에 의하여 이미 보상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황당한 궤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일본군‘위안부’ 범죄행위와 관련한 자료들을 모조리 감추어 두고, 이 사건에 일본국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은 일본정부당국의 철면피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일본정부는 자기들의 전시죄행을 청산할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본당국은 일본군‘위안부’들의 대부분이 살해되었고, 피해생존자들이 여성으로서 자기의 과거를 노출시키기를 꺼려하는 심리를 악용하여 이 사실자체를 영원한 흑막속에 묻어버리려 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방위청문서고에서 위안소에 설치 및 관리와 관련한 문서가 발견된 다음에야 마지못해 황군의 관여를 인정하였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여도 전시조건에서 20여만에 달하는 일본군‘위안부’를 강제연행하고, 관리하는 것과 같은 특대형 조직범죄는 당국의 관여없이 감행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군‘위안부’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이전 일본의 관리들이 일본정부당국의 지령밑에 이 범죄행위를 감행하였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그 어떤 술책으로서도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가 국가간 협정에 의하여 국가적 보상이 있을 수없다고 하는 것도 생역지에 불과한 것입니다.

국제법의 최고권위자로 인정되는 국제법률가협회는 얼마전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어떠한 협정도 일본정부에 대한 개인보상청구권을 제약할 수 없다는 것을 명백히 함으로써 개인보상을 거부하는 일본정부의 입장이 부당하다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하여 일본군‘위안부’범죄는 과거 일본국가가 저지른 비도덕적이며 반인륜적인 범죄행위로서 마땅히 현 일본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처리할 문제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정부는 민간기금안을 성사시킴으로써 일본군‘위안부’ 범죄행위에 대한 정부 책임에서 벗어나고, 보상문제를 민간인들에게 떠맡기려 하고 있습니다. 만일 일본정부가 추진시키는 민간기금안을 용인한다면 그것은 피해자들이 스스로 그들의 과거죄행을 벗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본정부가 저지른 전시죄행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무고한 일본인민들에게 추가부담을 들씌우게 될 것입니다. 민간인들의 돈주머니를 털어 선심을 베푸는 척하면서 자기가 저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일본정부 당국의 민간기금안을 우리는 절대로 용납하지 말아야 하며 일치한 행동으로 철저히 저지,파탄 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민간기금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경우, 일제의 일본군'위안부'만행을 묵인하고 나아가서 앞으로 일본이 그와 같은 범죄행위를 또다시 감행하도록 조장시키는 것으로 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정부가 인류역사상에 그토록 엄청난 범죄행위를 저지르고도 집요하게 과거청산을 회피하는 것은 결국 그들이 저들의 과거죄행을 합리화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며 범죄행위에 대하여 솔직히 반성하지 않고 그것을 극력 합리화 해 나서는 것은 앞으로 도 그러한 행위를 다시 감행하려는 기도를 속에 품고 있다고 밖에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군국주의 망령들이 되살아나 침략전쟁을 공공연히 미화하고 정당화해 나서는 것이 그것을 실증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전 일본의 일부 지방의회들에서는 과거 일제가 감행한 침략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고 하고 침략전쟁마당에 내몰려 죽은 전몰자들을 조국의 안녕과 고향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고귀한 생명을 바친 영웅이라고 하는 결의들을 채택하였습니다. 되살아난 일본군국주의 세력이 범죄적인 침략전쟁을 합리화하고 찬양하는 것은 곧 그러한 범죄행위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으로 밖에 달리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정부와 되살아난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이전 군국주의자들이 걸었던 범죄의 길, 침략전쟁의 길을 다시 걸으려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일본당국이 들고 나오는 민간기금안을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일본군국주의 침략야망에 부채질을 하는 것으로 되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고안해 낸 민간기금안의 교활성을 똑바로 가려보고 그를 단호히 저지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가 민간기금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일본군'위안부' 피해당사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우롱이고 모독이기 때문입니다.

일본군'위안부'문제는 몇푼의 보상금을 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적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군'위안부'들의 짓밟힌 존엄과 잃어버린 청춘, 그들의 가슴속에 남긴 뼈아픈 상처는 그 무엇으로서도 회복시킬 수 없습니다. 지금 일본군'위안부'들이 한결같이 일본정부가 물질적 피해보상만이 아니라 정신적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피해 보상이란 일본 정부당국에 과거죄행에 대하여 솔직히 인정하고 똑똑히 사죄를 한 데 기초하여 응분의 물질적 보상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본정부가 이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위문금이요 뭐요 하고 잔피를 부리며 여론을 기만하려는 것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2중의 범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본정부 당국은 일본의 과거죄행을 해결해야 할 당사자로서 응당 자기의 역사적 책임을 다하는 데서 성실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의 패망 50년이 되는 올해는 일본이 국제사회 앞에 자기의 성실성과 양심을 검증받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될 것입니다.

최근 일본정부가 과거 죄행도 청산하지 않고 유엔상임이사국의 지위를 얻어보려고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앓을 자리도 설자리도 가려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일본정부는 처신을 바로 해야 하며 그러자면 무엇보다 먼저 지난날의 죄행에 대한 진상부터 전면적으로 조사공개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일본정부가 민간기금안 이라는 것을 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 저지른 죄행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지고 피해자들에게 똑똑한 사죄와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합니다. 그

리고 전시범죄에 책임이 있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다시는 그런 범죄행위를 되풀이되지 않겠다는 것을 세계 앞에 실지 행동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교훈을 찾도록 하기 위하여 일본군의 '위안부' 범죄행위를 역사교과서에 사실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후대들을 옳게 교육하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일본정부가 죄악에 찬 과거를 성실히 반성하고 청산하며 역사의 오류를 다시 되풀이 하지 않고 아시아 인민들과 함께 진정한 친선과 평화의 길을 걸을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제의 일본군'위안부'범죄행위를 금년안으로 옳게 해결하자고 하는 이 마당에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데 대하여 응당 강조해야 한다고 인정합니다.

나는 이번 제 3차 일본군'위안부'문제 아시아 연대회의가 북과 남의 전체 조선여성들의 민족적 단합을 더욱 강화하고 일치한 행동으로 우리 조선여성들과 아시아여성들이 일본의 과거죄행문제에 대처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